

오늘의 주요기사

2023 3 3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	SGI	1
江原日報	27	“	”	1
江原日報	03		2,050 2027	2
江原日報	01	3
江原日報	02	3
강원도민일보	01		가 4097 ,	4
江原日報		[]	,	4
江原日報		[]	.	5
江原日報	27	[]	()	5
江原日報	27	[]	()	5
강원도민일보	11	[]		5
강원도민일보	19	[]	가 ...	6
江原日報	27			7
江原日報	16			7
江原日報	17			8
강원도민일보	01	"	"	9
강원도민일보	03	"	... 가가 "	10
강원도민일보	03	"	"	11
강원도민일보	03	"	, . "	12
강원도민일보	09	"	"	13
강원도민일보	09	"	' ' "	14
강원도민일보	02		8 5	15
강원도민일보	04	"	"	15
江原日報	02	4	... 가	16
朝鮮日報	15A	 “ ”	17
江原日報	01		...	18
강원도민일보	19	[]		19

강원도민일보	19	[]		20
江原日報	25	[]	,	21
江原日報	25	[]	, 가	22

2023 03 02 ()

江原日報

[포토뉴스] 도의회 이케다 SGI회장 특별현창패 수여식



'강원도의회 이케다 SGI회장 부부 특별현창패 수여식'이 최근 한국SGI 강릉영광문화회관에서 권혁열 도의장, 박호균 도의원, 김용기 법무보호위원강원동부지부협의회장, 권혁준 전 한중대대학원장, 김남숙 도재향소방동우회장, 김인수 한국SGI 이사장, 김경희 부인부장, 허진석 한국SGI강원1부방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3 03 ()

27

江原日報

“튀르키예 돕는 문화예술의 선한 영향력 전국으로 퍼지길”

춘천 갤러리4F서 자선전시회 개막 본보 등 후원·작가 30명 작품 소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옛 터키)를 문화예술의 힘으로 함께 도와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전시회 ‘희망을 그리다, 튀르키예’전이 2일 춘천 갤러리 4F에서 막을 올렸다.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G1 방송이 후원하는 전시에는 튀르키예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기획 취지에 공감한 작가 30여명의 작품이 소개된다.

임근우 작가는 대표 연작 시리즈 ‘고고학적 기상도’, 안용선 작가는 연밥을 소재로 그린 ‘군자의 꿈’을 선보이고 김남덕 작가는 겨울나무와 성난 파도를 카메라에 담았다. 갤러리 4F와 초대전으로 인연을 맺은 김성혜 작가 소개로 참여하는 타지역 작가들의



◇강원일보와 G1방송이 후원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돕기 자선전시 ‘희망을 그리다, 튀르키예’전 개막식이 2일 춘천 갤러리 4F(대표: 권오열)에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허인구 G1방송 대표,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박관희 도의원, 임근우 작가를 비롯한 참여작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남덕기자

작품도 전시·판매된다.

20호 이하의 크기인 작품들은 시장가 절반으로 판매 가격을 책정했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수익금 전액은 UN난민기구를 통해 튀르키예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시회에서 임근우 작가는 “작가로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정서적으로 메달라 있는 사회에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예술작품이 재화를 창출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를 지닌다. 많은 분이 동참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우리가 어렵던 시절 도와줬던 튀르키예를 위해 마음 모아주신 작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튀르키예 속담처럼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낼 수 없다. 오늘 의 시작이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은 “형제의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심시 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미술인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정성이 쌓여서 이재민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는 희망을 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현정·김민희기자

江原日報

2023 03 03 ()
03

레고랜드 개발 채무 2,050억 2027년까지 강원도에 상환

GJC 토지 매각 통해 변제 계획
7일 도의회서 동의안 심의 받아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토지 매각 등의 자구 노력으로 2027년까지 강원도 채무 2,050억원의 상환을 약속하면서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도는 오는 7일 개최하는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을 상정, 심의를 받는다.

이번 동의안은 앞서 도와 GJC 간 맺은 협약상의 도의 토지 환매 의무를 GJC가 자체 매각해 빚을 갚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가 기존 협약대로 GJC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간 2,0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컸다. 양측의 새로운 권리·의무 합의에 따라 도는 GJC가 채무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GJC의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채무 변제계획 변경과 GJC 자산 매각 및 매각 조건의 승인권을 갖는다.

반대로 GJC는 경영 정상화 계획과 채무 변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야하고 기한내 채무 변제 의무를 지도록 했다. 토지 매각 이행과 매매 대금의 채무 상환 의무도 명시됐다. 채무 변제 기일은 2027년까지다.

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매각하지 못한 14%의 잔여 토지를 팔면 700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토지 매각 후 받지 못한 잔금 1,190억여원을 더하면 채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오섭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담겼다. 정윤희기자

江原日報

정부 비협조·여야 대립 ... 살얼음판 특별도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

3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 D-100일을 맞았으나 정작 지역의 미래를 규정할 법 개정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 부처의 비협조와 여야간 강대강 충돌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봉 떠있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에 따르면 도는 매일 정부 부처를 찾아 특별자치도 특례 관철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으나 부처에서는 여전히 강원특별자치도로의 핵심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사들 42차례 방문한 정부 부처 권한 이양 미온적 반응 법안 심사도 국회 갈등에 난항 ... 지원위 통한 돌파구 기대

■정부, 특례 요구에 난색=실제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이후 강원도는 2월28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 수질오염총량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설명했고 23일에는 국방부와 접경지 농축수산물 군 급식 지원 특례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또 20일에는 법무부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 출입국 관리법 특례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권한을 내줘야 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

응이거나 일부는 '(요구가)과하다'는 입장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 각 특례별 소관 실·국과 특별자치국을 중심으로 한 답여간 42번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 갈등에 법안 심사 난항=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국면에 '쌍특감'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더욱 압박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올 4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강원도의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위에 기대=이에 강원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정치권을 통한 토탈운(하향식)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최기영·이하늘·정윤호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정부 비협조·여야 대립

살얼음판 강원특별도법

-1면에서 계속

특히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의 1차 회의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장관급이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부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2일 국회를 방문,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당부한 데 이어 8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전국적인 이슈화를 꾀할 방침이다.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01

하중도 관광지 조성 원가 4097억원, 강원도 토지환매 포기

GJC 대출금 대위 변제시 환매 의무
소유권 이전시 2047억원 추가 부담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와 함께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한 결과 조성원가가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당초 보증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추진했던

해당부지의 토지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본지 확인 결과,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의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GJC의 금융기관 대출금 대위 변제 시 GJC에 매각한 토지를 환매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GJC가 하중도 관광지 조성

상화 등으로 2050억원을 직접 마련해 구상채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담았다. 도는 GJC의 부지매매대금과 사업부지에 투입된 직, 간접 공사비, 용역비, 문화재발굴비, 금융비용, 테마파크 건립비 등을 검토한 결과 조성원가는 409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채무보증비용(2050억원) 외에 20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

큼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2일 "GJC가 토지매각으로 2050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환매하는 규정이 정당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미 경산위 위원장은 "토지소유권이 어렵다는 것을 강원도가 당초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며 계획 번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일 도의회 31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3 02 ()

[포토뉴스] 양숙희 도의원, 튀르키예 후원 전시 출품



양숙희 도의원(춘천)은 2일 춘천 전시·문화공간 갤러리 4F에서 강원일보와 G1방송 후원으로 개최되는 '희망을 그리다, 튀르키예' 전에 자신의 작품 '희망의 길목에서'를 기증해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은 UN난민기구를 통해 튀르키예에 전달된다.

2023 03 02 ()

江原日報

[동정] 엄윤순.최재석 도의원

엄윤순 도의원(인제)은 3일 오전 11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리는 (사)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최재석 도의원(동해)은 3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년도 제2회 강원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3 03 ()
27

◇최재석강원도의원(동해)
은 3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년도 제2회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3 03 () 2023
27

◇엄윤순강원도의원(인제)
은 3일 오전 11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리는 (사)한국생활개선강원도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11



양숙희도 의원은 3일 오후 6시30분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한림대 AMP 총동문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19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기원 릴레이 기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100일 남았다.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끝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많은 분이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다. 이번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답을 줬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41년 걸렸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년만에 될 수 있고, 제2, 제3의 오색케이블카도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규제로 꽁꽁 묶여있다. 4대 규제 총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나 된다. 말 그대로 ‘규제 백화점’이다. 원주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당장은 쉽지 않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원샷에 해결하고자 한다. 지긋지긋한 규제를 풀어서 강원도에도 기업과 공장들이 들어와 경제가 발전하면, 강원도 사람들이 좋겠냐? 강원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우리

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한정된 국제 (international) 도시를 넘어, 더 개방되고 더 자유로운 글로벌 (global) 도시를 지향한다. 자연, 생태, 환경은 걱정하지 말라. 강원도는 지난 628년 동안 청정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그런 가치를 담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땅덩어리도 좁은데 무슨 지방자치냐?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풀뿌리 지방자치로 완성된다. 서구민주주의의 역사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시작했다. 미국과 독일은 지방정부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연방정부가 생겼다. 선진국 대부분 그러하다. 우리는 천년 넘게 중앙집권국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다. 사실 민주주의의 DNA는 지방자치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금융 등 일부 정책만 담당하고, 대부분 주정부 권한이다. 법인세, 소득세 세율도 주정부에서 정한다. 우리도 강력한 분권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세율도 깎아줄 수 없으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다. 기업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고 기업 스스로 오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잘 산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해서 더 못살게 되더라도 좋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치권은 달리 말하면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뜻한다.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 절구통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 강원도에서 스스로 떡을 만들더라도 다른 17개 시도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 오히려 모든 시도가 ‘특별자치 시도’가 되어 고도의 분권을 확보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이제 D-100일! 기대나 설렘에 앞서 걱정도 크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용없이 빈 껍데기로 출발하게 될까 봐 그렇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 할 것이 없다. 그게 강원도의 힘이다. 요즘 강원도가 대세 아닌가.

江原日報

2023 03 03 ()
27



신경호 도교육감 소양중서 새학기 인사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 일 오전 소양중을 찾아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 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2023 03 03 ()
16

江原日報

강원특수교육원 옛 도농기원 자리에 짓나 촉각

춘천유치추진위·도청 강북추진위 신경호 교육감에 건의
도교육청 부지 선정 추진단 구성·도유지라는 점 등 변수

【춘천】속보=춘천에 강원특수 교육원 본원 설치가 확정(본보 2일자 1면 보도)되면서 특수교육원 본원이 어디에 들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지 선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앞서 강원특수 교육원 춘천유치추진위원회와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가 신경호 교육감을 만나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를 건의한

사실이 알려져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강원특수교육원 춘천유치추진위원회는 인근에 특수학교 2곳이 있고 강원도교육청과의 접근성, 강북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도 도청사 이전부지 선정 이

후 김진태 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에 강원특수교육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청사 신축 부지를 발표할 당시 신사우동을 교육·문화·예술 복합지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구 농업기술원 부지에 강원특수 교육원 유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춘천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 지역을 구 농업기술

원 부지 1,985㎡로 정하고 강원특수교육원 본원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육동한 시장은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 등을 만나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 국비 45억원을 신청하고 강원도와도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가 도유지라는 점, 도교육청의 부지 선정 추진단 구성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도유지와 도교육청 부지와의 맞교환 등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은 강원특수교육원 본원에서 담당하고, 학령기 이후에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통해 학령기부터 성인까지 연계한 평생교육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부지 선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3 03 ()
17



◇원주시의회는 2일 강원도교육청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결정에 반발, 추천 본원 설립 결정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특수교육원 설립 결정 원주시의회 반대 성명

【원주】속보=원주시의회가 강원도교육청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결정(본보 2일자 1면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강원특수교육원 추천 본원 설립 결정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원특수교육원 선정 과정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것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은 원주시민을 우롱한 교육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신경호 교육감이 본원을 추천으로 내정했다는 공약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남윤기자

2023 03 03 ()
01

강원도민일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공익개발 한다면 적극 협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야 국회포럼

- 접경지역 거미줄 규제 조정 전망
- 민통선 필요 부분 복잡 검토
- 먹거리 유통센터 설립 전제
- 군납 수의계약 가능성 등의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공익 사업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한 핵심 특례안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첫 표명, 접경 지역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가 합리적 것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접경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군납 농축 수산물 경쟁입찰 방식이 일부 수의계약으로의 환원 가능성이 높아져, 강원특별법 개정안 4월입법관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사가 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야 국회 포럼’이 2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야 국회포럼이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중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군사 전문가, 교수 등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김정호

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우선적으로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공익사업 및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면 국방부는 적극적인 협조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인통제선 거리완화에 대해선 “민통선 일괄 복상은 상당한 논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지자체 또는

주민개발사업에 맞춰 필요한 부분에는 외적으로 보상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접경지역 군납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국방부 군납 경쟁 조달체계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접경지역 지자체나 화천에서 먹거리유통센터 만들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정도

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포럼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 민통선 거리완화, 군납 경쟁입찰 등 접경지역의 패기지원안 이 특별법 개정안 관철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점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포럼에 앞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방부와 접경지역 주민 양측의 충돌지점이 적지 않지만,

이것을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양쪽이 다 손해본다”며 “이 부분은 용인할 수 없기에 (국방부가 가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군납, 미활용 군용지 현안에 대해 국방부에선 다할 수 있고 문제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라며 “군사 등 핵심 규제 개선 없이는 특별자치도가 반쪽 밖에 안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용산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전쟁 희생자들은 보상을 해주는데 접경지역은 왜, 지역적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느냐”며 “도민들이 안보 첨단도에 살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군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최문순 화천군수, 이현중 철원군수가 발제·토론에 나서 접경지역 붕괴 위기를 전했고, 군사규제로 재산 피해를 본 고성 주민들이 참석해 국방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박지은·정승환·이세훈

▶ 관련기사 3·9면 상보 6일자

2023 03 03 ()
03

강원도민일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접경지역… 국가가 응답할 차례”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분야 국회포럼

최문순 화천군수 ‘절절한 호소’
“국가안보 빌미로 소비재 전략”
이현중 철원군수도 목소리 높여

“접경지역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다.”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분야 국회포럼에서 울려 퍼진 최문순 화천군수의 절절한 호소였다.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협의회장인 최문순은 ‘접경지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하며 울분을 토했다.

최 군수는 할당된 20분을 훌쩍 넘어 30여분 이상, 접경지역의 황폐화된 현실을 전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70년 동안 살았다”며 “공무원으로 47년을 생활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접경지역의 민심이 어떠한지 이 집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은 국가안보에 의한 소비재로 전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겨나는 불만 이 많다”고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문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면 서울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분야 국회포럼에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김경호

국민이 아니냐”고 작심 발언을 한 뒤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믿고 살데가 없다”고 호소했다.

최 군수는 ‘일방적 국방정책’, ‘금이 가는 민군상생’, ‘일방적인 군납 경쟁 입찰제도 도입’, ‘대안이 없는 국방개혁 2.0’ 등 국방부 정책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싸늘한 여론을 전하면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중심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경기도 등이 참여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안보의 짐은 접경지역 주민이 아닌 정부와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중 철원군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군수는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좋은 땅을 다 차지했고, 주민들의 땅까지 강제로 빼앗는 등 희생을 강요했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삼중 중복규제로 시름속에 살

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접경지역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기대가 컸지만 일반법보다 못한 법”이라며 “실질적이고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포럼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메모했고, 포럼에 참석한 노용호 의원도 접경지역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승환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03

“관사 짓는다며 땅 빼앗아” 울분 토한 고성주민

국방부 관심·해결책 마련 촉구

“접경지역 주민들의 한(恨)을 하소연 하러왔습니다. 꼭 풀어주십시오.”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분야 국회 포럼’에선 군사규제로 재산권 피해를 본 고성 주민들이 참석,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일찌감치 포럼장을 찾은 고성 주민들은 객석 질의를 신청, 재산권 피해 사례를 전하며 국방부의 관심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포럼이 끝나고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포럼 종료 후, 국방부 공무원이 고성 주민들과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

고성군 토성면에 거주하는 이영자(80)씨는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왔던 땅에 군(軍)이 관사를 지을 예

정이라며 땅 소유권을 가져갔다. 시골 사람이 아는 것이 있겠나, 다 뺏기고 나니 지금도 이모양 이꼴로 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 그 땅에 지어진 관사는 2년이 넘도록 비어있다. 군부대 해산에 따라 관사까지 비어있으니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해도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한(恨)을 하소연할 자리가 여기뿐이어서 왔다. 꼭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고성군 죽왕면에 거주하는 박승자(71)·신준수(68)씨도 미활용 군용지 현안 해결을 언급했다. 이들은 “군사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군용지에 대해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세훈·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03

“군사규제 개선, 안보·지역발전 양립 최선”

인터뷰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군사분야 특례 관철 의지 거듭 밝혀
지역-국방부 긴밀한소통·협조 강조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음성·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완성은 군사규제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민일보사가 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야 국회 포럼’ 참석에 앞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군사 분야 조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검토해왔다”며 군사규제 해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다. 이어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48.29%(2319.5km)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개발 등 주민과 지역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돼 지역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군사규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선 지역과 국방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과 국



방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제한보호구역 규제 완화 규정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

다”며 “상호간 분명한 협의가 있어야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의미는 도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 역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군사규제 개선에 있어 안보와 지역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09

발제1

접경지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군납경쟁입찰제 도입 지역경제 악화 정부대책 필요”

최문순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회장·화천군수

군부대 공공처리비용 지원 등 해결 모색

접경지역 주민들은 6·25전쟁 참극상을 잘 기억하고 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살았고, 지역 군부대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왔다. 군장병이 지역경제를 거들어줬고, 군납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방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접경지역 주민은 국가안보에 의한 소비재로 전락했다. 접경지역은 군부대 때문에 개발이 불가해 생활환경이 나빠졌고, 인구소멸지역이 됐다. 산업구조도 취약해졌다. 여기에 국방개혁 2.0에 의해 군부대가 빠져나갔다. 사전대책이 강구됐어야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는 불만이 많다.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개발을 하지 못해 자산적 손실이 크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해결할 능력이 안된다.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접경지역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군납경쟁입찰제 도입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크게 상심했다. 국방과 안보는 군인들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관·군이 하나될 때, 협력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떠나기 시작

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직시해서 중앙정부에서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이 없으면 국가안보에도 누수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광화문에 포를 설치하고, 포사격 훈련을 하면 서울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접경지역 주민은 포소리를 들어야 하고 서울시민들은 들으면 안되는 것인가.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접경지역특별법이 있지만 이름만 특별법이다.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우선 구매, 군부대 공공처리비용 정부예산 지원, 병력재배치로 발생하는 군 유휴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의 짐은 접경지역 주민이 아닌 정부가 지어야 한다. 전방의 민심이 흔들리면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겠냐. 군(軍)과 국민이 함께 해야만 접경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단순한 발전 넘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특례 발굴”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미활용 군용지 특례 자치분권 부합 평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토지 이용에 제약받고 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진정한 분권에 부합하는 특례로 평가된다.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접경지역 전체 면적의 48.8% (2354km²)를 차지한다. 군사규제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 규모는 자산가치 손실 8조1400억원, 연간 생산손실액 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도 소유 토지 중 336만m²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199만m²를 무상임대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도내 사유지 428만m²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산권 피해는 최소 164억 6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263만m²에 이른다. 이에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특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이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건의하더라도 지자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도 소유부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강원도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민간 인통제선 지정범위 규정이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는 군의 일방적 기준이 적용돼 명확한 범위가 부재해 있다. 이는 강원도의 발전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에 강원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및 협의회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를 국방부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사규제 해소에 있어서의 관점은, 먼저 강원도에만 특례를 부여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법률로 인한 제약요인을 근거로 특별법의 정당성을 보완해야 하며 핀셋형 특례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또, 군사규제 해소=접경지역 발전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부합하는 접경지역 특례 발굴을 연계해야 한다.

정리/정승환·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02

도내 전문대학 8곳 중 5곳 신입생 총원율 하락

올해 전체 신입생 총원율 87.1%
송곡대 5.5%p↓ 하락폭 가장 커
“학생 일반대학 선호 모집 어려워”

강원도내 전문대학 8곳 가운데 5곳의 올해 신입생 총원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전문대학의 전체적인 총원율은 올랐으나 8곳 중 5곳(강원도립대·강원관광대·송곡대·한국골프대·한림성심대)에서 신입생 총원율이 하락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98%의 총원율을 기록했던 송곡대가 올해는 92.5%의 총원율을 보이며 5.5%p 하락했고, 올해 93.1%의 총원율을 나타낸 한국골프대는 전년(97.5%) 대비 4.4%p 떨어졌다.

지난해 총원율 100%를 보인 강원관광대도 올해는 98명 모집에 94명이 등록(95.9%)해 4.1%p 하락했다.

한림성심대와 강원도립대도 전년

(각각 88.3%, 94.9%) 대비 소폭 하락한 87.5%와 94.2%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총원율이 반등한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호대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세 곳의 지난해 신입생 총원율은 각각 79.8%, 86%, 70.6%다. 세경대는 전체 평균 총원율(86%)과 같았고, 다른 두 곳은 평균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해, 세경대는 87.7%를 기록하며 도내 평균(87.1%)을 넘었으나 강릉영동대(82.6%)와 송호대(81.2%)는 평균보다 낮았다. 도내 전문대학 8곳의 2023 학년도 신입생 총원율은 입학정원 3206명에 2793명이 등록한 87.1%로 집계, 지난해(86%)보다 1.1%p 상승했다.

도내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반대학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문대는 신입생을 모집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04

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폭처리 절차상 문제 없어”

생기부 전학조치 기재 확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도내 자사고에 재학하던 당시 동급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교폭력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이 2일 학교와 도교육청은 학폭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교육청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2018년 6월 29일)’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사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전학조치를 내리고, 해당 내용을 2018년 3월 22일자로 입력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2018년 5월

3일)에서 ‘전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학교는 2018년 5월 28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 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피해 학생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면서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2018년 6월 29일)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일 본지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엽

2023 03 03 ()
02

江原日報

연봉 4억 줘도 의사 못 구해 ... 결국 정부가 나섰다

강원도내 의료원들이 4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료를 영입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전문 인력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21일까지 연봉 4억2,000만원을 제시하고 3명의 응급실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1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 속초의료원은 자격 요건을 기존 의사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급의학과 4년 수료자까지 확대, 지난달 24일 3차 채용 공고를 냈다. 의료 인력 부족은 영월의료원도

도내 의료원 인력 영입 난항 응급실 등 운영 차질
태백·고성·양양 등 3곳 보건소장 수개월째 공석
복지부·지역거점병원 참여 전공의 수련사업 협약

마찬가지다.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6월 내과 전문의가 그만둔 뒤 연봉 4억원으로 수차례 영입 공고를 냈지만 8개월째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야간 진료를 맡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 공개채용에도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또 강릉의료원도 2021년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퇴직한 뒤 현재까지 새로운 전문의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들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 국립대병

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통해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해 11월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도내 4개 의료원의 요청을 받아 12명의 공공임상교수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까지 이어진 임상교수는 7명에 불과하다.

태백, 고성, 양양 등 3곳은 지역 보건을 총괄할 보건소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시장·군수와 비슷한 수준인 1억원 안팎의 연봉에도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재)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 병원장 후임으로 병원을 이끌어 갈 신임 병원장을 구하기 위해 최승준 군수가 직접 정선 출신의사를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 병원 간 인력을 교류하는 제도인 '개방형 병원' 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과정 중에 있어 한동안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각 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장·단기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일 강원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5곳과 속초·영월·삼척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강원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는 속초·영월·삼척의료원에서 1~2개월간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전공의는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 기회를 얻고 지역의료기관은 짧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2023 03 03 () / 15A

朝鮮日報

오색케이블카 통과되자... 고성·보은·대전 “우리도”

지자체들 앞다퉀 건설 나서

강원도의 41년 숙원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난관인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해 본격적으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던 지자체들이 들쭉이 있다. 강원 고성군과 충북 보은군, 대전시 등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하던 지자체가 잇따라 본격 사업에 나설 조짐이다. 이에 대해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서면 오색리-끝정 3.3km 구간)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조건부 동의’로 결론 냈다. 환경 악영향 최소화 조건을 이행하면 사업을 실행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수차례 백지화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982년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강원 고성군은 토성면 신행리 금강산 화암사 주차장에서 해발 645m의 신선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1.52km의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신선대는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 자락에 있다. 고성군은 신선대에 오르면 설악산 울산바위와 동해 바다, 미시령 옛길, 속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

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바위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과 상부 정류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유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화암사, 민간 투자사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인 신선대 일원은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밖이어서 공원 계획 변경 등 절차가 필요 없는 곳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2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조계종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국립공원 케이블

강원 고성, 500억 민간투자 유치해 총 1.5km ‘울산바위 케이블카’ 추진

충북 보은, 속리산케이블카 재검토 환경훼손 우려에 멈췄다 다시 활기

대전시, 보문산 관광 활성화 위해 적극 검토... 울 하반기 용역 착수

카 사업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은군은 2004년부터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보은군은 속리산면 사내리 아영장-천왕봉(3.6km), 사내리 아영장-경업대(5km), 사내리 수정초-문장대(4.8km) 등 여러 노선을 구상했다. 2018년에는 사업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말 속리산 내 대표 사찰인 법주사(사적 제503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사



고성군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 자락에 자리한 신선대(해발 645m)에서 바라본 동해 바다 전경. 이곳에선 설악산 울산바위와 속초 시내, 미시령 옛길 등의 전망도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강원 고성군은 토성면 신행리 금강산 화암사 주차장에서 신선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1.52km의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구상하던 케이블카 노선이 법주사 주변을 지나는 탓에 법주사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휩싸였기 때문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침이 나온 것은 없지만 군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관련 검토를 다시 할 것으로 본다”며 “법주사 주변 환경도 보호해야 해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도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인 중구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여 대전의 랜드마크 만들기 위해선 케이블카 설치가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최근 다른 국내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하반기 중 관련 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는 “보문산 케이블카 추진은 전임 시장 시절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남 구례군과 경남 산청·함양군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 주요 시설물이 주변 자연 생태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우정식·정성원·신정훈 기자

江原日報

2023 03 03 ()
01

건조경보속 강풍 ... 동해안 대형산불 비상

시속 36~75km 강풍 계속돼
산불센터 24시간 상황실 가동

7,000여ha를 태운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건조특보와 강풍까지 더해지며 대형산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당국은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평지에 건조경보가 발효됐다. 이에 앞서 도내 산지와 원주, 영월, 태백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강수량은 강원도 63.7mm, 영동 94.7mm, 영서 48.3mm로 평년(강원도 87.6mm, 영동 110.8mm, 영서 75.9mm)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역대급 건조한 날씨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강원도 24.9mm, 영동 46.8mm, 영서 13.9mm)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12일까지는 비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지와 정선 등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3일 지역에 따라 내륙은 시속 36~54km, 산지는 시속 75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산불방지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산불진화임차헬기 10대를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불감시인력과 더불어 드론을 투입해 취약시간대 감시도 강화한다. 센터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

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일은 아침에 춥다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7도, 춘천 영하 6도, 원주 영하 3도 등 영서는 영하권을, 강릉 4도, 고성 3도 등 영동은 영상권을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강릉 17도, 춘천·원주 12도, 철원 1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전명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 19

봄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만전을

-건조한 날씨 강풍에 잇단 화재, 순찰 강화 필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이어지면서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강릉과 삼척·경북 울진 등지에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관리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소식은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 9분쯤 평창 미탄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확산했습니다. 다행히 산림당국은 화재진화 차량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1시쯤 고성 현내면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한달 동안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봄철 화재는 2912건에 이르러, 전체 화재 중 29.8%에 달했습니다.

다. 재산 피해는 소방 당국 추산 29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4087억원 중 7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봄산불의 위력과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특히 양간지풍을 비롯한 동해안 강풍은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이어지게 하는 복병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비책은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등산객의 출입 제한과 함께 발화물질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야산에 인접한 농지의 논두렁 태우기는 자제해야 합니다. 산기슭 주택이나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진화 장비 구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일을 상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의 담배꽂초 투척이 큰불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이 조기 진화의 조건입니다. 예산이 추가 되더라도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대형 산불로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합동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3 03 ()
/ 19

주민 체감하도록 정책 공론장 지속돼야

-특별자치도 100일, 전략적 대응위해 각계 지혜 더 모으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D-100일을 맞아 오늘(3월 3일) 그동안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비전을 정하고 여러 규제 완화와 특례를 발굴하는 등 자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지 않은 강원도민은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의 비전이 피부에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있기에 남은 기간 강원도의 분발이 요청됩니다.

강원도는 1990년대부터 지역 여건과 시대변화에 맞춰 특별법의 시대를 이어왔습니다. 1996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과 2000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이어 2012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을 통해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특정 시·군이 아닌 도내 전역에 해당되고 다방면 영역에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분권제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범에 따른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한 공론화는 읍·면 단위까지 세세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부문에 대한 특례 발굴은 도가 강조하는 일부 산업에 한정된 감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원주에서 열린 첨단산업포럼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글로벌경제의 뜨거운 이슈인 로봇과 인공지능산업 방안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강원도내 대기업에서 개발한 로봇 제품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례로 낙후된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출범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녹록지 않지만,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주민의 직접 지역자치행정 참여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고도의 자치분권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시·군 및 읍·면별로 결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의 장은 지속적이고도 활발해야 합니다.

또한 초석이 될 법안 총칙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구현 방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만 규정된 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정의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차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공론화장을 멈출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마을별, 영역별, 산업별 토론 활성화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3 03 ()
/ 25

소비심리 위축, 지역 상경기 되살릴 방안 없나

강원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고금리 행진에 소비심리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 1월 강원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형소매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꽉 걸어 잠근 모습이다. 경기가 냉각될수록 소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역경기는 오히려 소비를 달하는 쪽으로 악순환하고 있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이 중지되고, 생산이 중단되면 경기가 경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 전년 대비 7.7% 줄어
제조업·건설업 등도 매출 감소로 위기 고조
지자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더욱 중요해져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는 일반 기업들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기업경기가 얼어붙으면 일반 시민들의 골목 소비도 적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제조업은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강원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도내 제조업 업황 전망BSI는 전월과 동일한 62로 집계됐다. 도내 제조업 업황 전망BSI는 지난해 10월 68을 기록한 뒤 11월 65, 12월 64 등으로 떨어지다 올 1월 반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 달 뒤인 지난달 주저앉고 보험세를 나타냈다. 실적은 하락 폭이 컸다. 2월 업황BSI는 57로 전월 62보다 5포인트나 감소했다. 강원 지역내총생산(GRDP)의 9%를 차지하는 도

내 건설시장도 한파를 체감하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수주가 56.9%, 민간부문에서 68.5% 각각 감소했다. 강원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건설산업이 유례 없는 수주절벽 끝에서 있다. 예산 감액, 금리 인상, 자재 값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의 기성액은 4년 만에 꺾였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무실적 업체가 132개나 됐다. 2020년 101개, 2021년 102개에서 지난해에만 30개가 늘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의 징후로 여겨진다. 산업계에서는 벌써 긴축 운영에 나선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투자와 고용까지 감축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면 고용 및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이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자리사업과 SOC사업에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江原日報

2023 03 03 ()
/ 25

학교폭력,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강원도 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정순신 변호사가 2017년 강원도 내 모 자립형 사립고 재학 중이던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전력’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함께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증가했다. 본보가 최근 강원도 내 16개 시·군교육지원청(영월 제외)을 통해 확보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20년 514건, 2021년 999건, 2022년 926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엔 다소 주춤했다가 등교가 재개된 2021년 거의 두 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린 셈이다.

징계 처분에 불복, 강원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7년 21건이었던 취소 청구는 2018년 29건, 2019년 35건, 2020년 40건에서 2021년 63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서면사과)만 받아도 학생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남는다. 당장 고입, 대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 이렇듯 학폭위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

작하면 피해자는 사과를 받을 수 없어 갈등이 증폭된다. 학교가 법정이 돼 간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학교 폭력은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의 폭력 문제 방지와 근절을 위해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 전문사회복지사 등 보호서비스 인력이 폭력 사태를 조사·관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의무화하는 등 폭력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및 심지어 폭력 가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호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의 순환성과 반복성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폭력 가해자도 어릴 적 한때는 피해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며, 결코 처벌만으로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여기에다 보호서비스 제공 수준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OECD 국가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School social work)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